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12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환경부장관

조 명 래

●대통령령 제3025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중전의 사목) 중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를 “1차식품 및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제품”으로 한다.

사. 전자제품류(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본문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제1호의2 및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의 접수 및 평가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율이 적용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의 최종 연도까지의 연차별 재활용의무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평균 재활용률 + (장기 재활용목표율 - 평균 재활용률) × 재활용목표율의 반영계수 + 조정계수

별표 5 제2호 비고 4) 및 5)를 각각 5) 및 6)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5)[중전의 4)] 중 ““전전년도 재활용률””을 ““평균 재활용률””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낮출”을 “변

경찰”로 한다.

- 4) “평균 재활용률”이란 전전년도부터 과거 3년 동안의 재활용률에 대해 최근 연도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평균 재활용률을 말하며, 가중치는 최근 연도순으로 0.5, 0.3, 0.2로 적용한다. 다만, 전전년도부터 과거 3년 동안의 회수·재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 전전년도부터 과거 2년 이내 재활용률을 가중치 없이 평균한 값을 말한다.

별표 8 제2호다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 다. 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 제2호의2 | 100 | 200 | 300 |
| 라. 법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 제2호의3 | 100 | 200 | 30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장방법 기준 준수 대상제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호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의무를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2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율을 산정·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2]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1.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그 제조·수입 및 판매가 중단되는 기간(이하 이 표에서 “중단기간”이라 한다)에 제3호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중단기간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중단을 명한 기간을 말하며, 중단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3. 중단기간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포장재·제품의 1일당 출고·수입량에 재활용의무율과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출한다.

$$1\text{일당 과징금} = 1\text{일당 출고} \cdot \text{수입량} \times \text{재활용의무율} \times \text{재활용단위비용}$$
4.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1일당 출고·수입량은 과징금 부과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전년도 1년간의 총출고·수입량을 360일로 나누어 환산한다. 다만, 해당 연도 사업개시 또는 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총출고·수입량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출고·수입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출고·수입량을 각각 90일 또는 30일로 나누어 1일당 출고·수입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해야 하는 경우 중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 등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제조·수입 등의 중단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 제품 확대(제7조제2호사목 신설, 제7조제2호아목)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에 차량용 충전기,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전자제품류를 추가하고,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종합제품에 완구·인형류, 문구류, 의약외품류 및 의류를 추가함으로써 과대포장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려는 것임.

나.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7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 1)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중단명령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 2) 서면 통지를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하고,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 3) 과징금의 금액은 포장재·제품의 1일당 출고·수입량에 재활용의무율과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중단기간을 곱하여 산출함.

다. 재질·구조 평가 결과 미표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별표 8 제2호다목 및 라목 신설)

포장재 겉면에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12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 정 욱**

●대통령령 제30260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 체계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 및 타당성 검토
 3. 여성폭력방지정책과 다른 분야 여성정책과의 기능 조정
 4.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제4항 및 이 조 제1항·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은 변경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